

G-Welfare Weekly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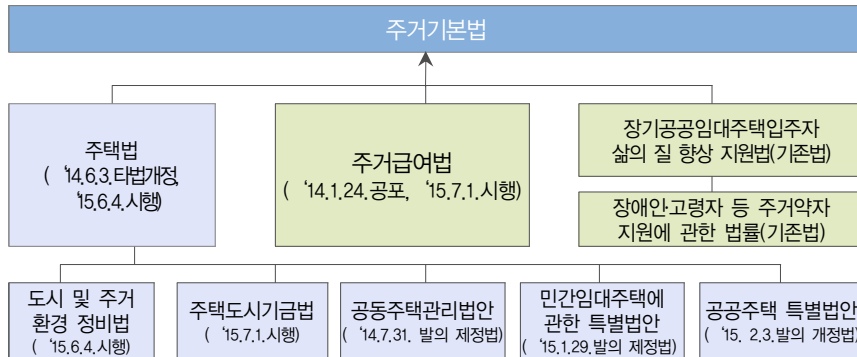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주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5.5.29)

01 제정의 의의 및 법률체계

- 주거관련 최상위의 법적 지위를 갖는 법으로 주택정책의 기본사항을 보다 충실히 기술하는 등 국민의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규정
- 그 하위 법 체계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그림〉 주거기본법의 법률체계

- 기본법 외에 주택정책의 세부수단에 필요한 특정 사안을 전문적으로 규정한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제개정됨
- 먼저, 기존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기존의 법령으로 활용함
- 다음으로, '주택도시시기금법'을 제정하여 공공주택(분양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던 '주택법'상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분야까지 확대하고 기금은 신설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발의 중인 법률로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법안'을 마련함. 또한 기존의 임대주택에서 규정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공공주택특별법안(기존의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 포함)'으로 변경 예정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주거기본법을 최상위법률로 하여 주택법, 주택급여, 약자를 위한 주택 법률로 체계화

02 주요내용

-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기본원칙 규정
- 국민 주거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유도주거기준 신설
 - 4인가족 기준 최저주거기준 : 방 2개, 부엌 1개, 36㎡, 유도기준 적용시 방4개, 부엌1개, 66㎡
-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사를 양성하고, 정보제공 및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신설 및 주거복지포털 구축

주거복지사 양성, 주거복지센터 신설,

03 경기도의 향후 과제

- ‘주택법’에 근거한 기존의 경기도주거복지조례를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 법률조항을 반영하여 개정 필요
- 경기도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 주거기본법제6조, 제9조 (사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10년단위) 조항 및 경기도 조례 제4조, 10조(주거복지 기본 계획수립:5년 단위)에 의거
- 경기도형 주거복지센터 신설 및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는 주거복지사를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파견하는 등 주거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
- 주거복지포털을 활용한 사군 단위로 주거복지 현황 분석 및 정보접근성 제고 : 2014년말 정부에서 구축한 임대주택포털에 주거급여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주택기금포털 등을 연계

상위법 제정과 연동하여 경기도 조례 개정 요구

2.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1 배경 및 주요내용

- 2014.7월 기초연금 도입 후 기초연금을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기존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한 경우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

■ **주요내용 1)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반영의 현실화**

소득평가액 산정시 금융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반영금액을 ‘일정금액 이상’ 으로 규정(안 제2조제3호)한 현재 소득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반영 규정을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 의 소득으로 변경

■ **주요내용 2)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

기초연금 이력관리에 동의한 신청자는 선정기준액 조정 등 제도 변동사항 발생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대상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

입법예고 기간
2015.6.4.~
2015.7.14

02 시사점

- 개인이 매년 기초연금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재신청하는 수고로움을 덜어 대상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여부 파악을 위해 127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재산, 소득 등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바 인력충원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전국 지자체의 주거복지조례

국가 주거정책 기본원칙이 담긴 주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치솟는 전세 값과 급증하는 월세 전환에 대응해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재고 관리, 주거복지 중심의 통합적인 주거정책 마련이 요구

* 지자체별 주거복지 조례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서울	노원구 노원구 주거복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3.21	
대구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5.16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
인천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4.12.15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광주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3.2.15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4.2.17	건설도시국 건축과
경기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2015.1.5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2.3.12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2013.1.28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2013.11.8	
전북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2011.8.16	생태도시국 주택과

지자체별
주거복지 조례
제정 현황

* 주거복지조례 입법예고 현황

자치단체	공고일자	공고(공포)명	소관부서
광주	2013.2.15.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
전북 고창군	2015.4.8	고창군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사례

주거취약계층 통합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주거복지기본조례 제16조~18조 의거 주거관련 비영리법인 수탁기관 선정, 2013년 12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체납 등 강제퇴거위기에 몰린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문제 관련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주거복지종합서비스 제공

*상담사업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등)에 대한 입주관련 상담, 안내, 입주신청 지원. 전세자금 대출, 서울시사회복지 기금융자,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제도 상담

*긴급주거비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 사업

주거취약계층(장애인,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발굴 및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 보증금 월세 없이 거주지 강제 퇴거위기 가구 지원, 지역자원과 연계사업 추진

*교육 및 네트워크사업

자치구(주민센터), 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상담 연계 등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긴급주거비 지원 및 각종 지역자원과 연계지원 추진, 단체실무자, 주민 대상으로 주거문제 해결 위한 주거복지 교육 실시

*구별 주거복지지원센터 현황(10개)

성동성북강북노원은평서대문금천영등포관악송파 주거복지지원

서울시 사례

2.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 등 제정

-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적 지출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좋지 않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을 경기도정에 도입·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사회성과연계채권이란 투자수익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민간자본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 발휘와 공공의 신규 재원투자에 따른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성과급 투자 방식임
- SIB 방식의 사업을 통해 공공은 신규 복지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혁신적 사회문제 대안 모색 등으로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사회공헌 영역의 다각화와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 가능함
- 경기도는 SIB 사업을 통해 공공의 비용 최소화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제정 현황(2015. 6. 17. 현재)

의안명	제출자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안	원미정 의원 등 40명
경기도 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근철 의원 등 18명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종섭 의원 등 18명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 등 18명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김의범 의원 등 18명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호 의원 등 16명

3.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지원사업 : 신청기간 6.11.(목)~6.24.(수) 18:00 1. 기획사업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일반차량 지원사업' 2. 복권기금사업 : 2015년 복권기금 차량지원사업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안전노하우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기간 : 2015. 6.12.(금)~6.19.(금) • 사회복지신문 CI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기간 : 2015. 6.9.(화)~6.19.(금)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봉사단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대상 : 도내 6개 지역 대학교 재학생 - 모집기간 : 2015.6.3.(수)~6.19.(금) 18:00 • 제16회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5. 6. 26.(금)까지 - 표창 훈격 :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입법예고기간 :
2015.6.1.~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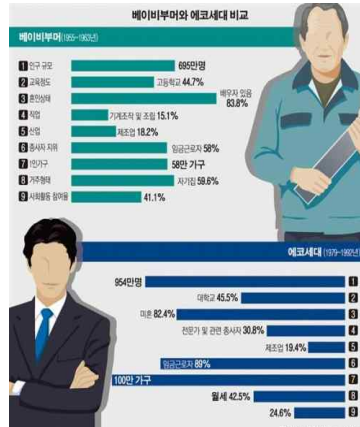
민간투자방식을
복지사업에 도입

03

FACT CHECK

출산율, 에코세대에 달려있다

-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2005년 1.26에서 2013년 1.43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4년 1.42을 기록해 전년 대비 0.01p 낮아지며 9년 만에 감소. 그 이유는 만혼화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주니어세대(에코세대)가 40대에 들어서 출산 붐이 사실상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인구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후생노동성, 2015)
- 우리나라도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에코세대 (1979년~1992년 출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통계청 조사(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에코세대는 총 9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82.4%가 미혼**으로, 이렇게 높은 미혼률로 인해 전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에코세대 기혼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1.10명으로 베이비부머 세대(2.04)의 50% 수준이며, 1인 자녀의 비중이 높음
- 그러나 만혼의 추세를 감안할 때, 2015년 24세~37세인 에코세대의 대부분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데는 5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 출산율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출산-보육통합지원정책의 병행이 필요



자료 : 통계청(2012) 보도자료: 이투데이 2013. 10.16일자 기사

*에코세대 : 베이비부머 세대가 낳은 자녀세대를 칭함.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제2의 베이비붐이 나타남을 의미

04

통계로 보는 복지

OECD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자료 :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자료 : 통계청

- OECD 소득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1%의 부자들이 전체자산의 18%를 보유한 반면, 소득 하위 40%는 전체 자산의 3%를 소유하여 빈부격차가 심각함을 보여줌
- 상위 10% 소득은 하위 10% 보다 9.6배 많고, 1980년대 7배였던 것이 2013년에는 10배에 달함.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는 미국으로 상위과 하위 간의 격차가 19배임
- 한국의 상대적빈곤율은 OECD 평균(11.2%)보다 높은 14.6%이나 지니계수는 2009년을 정점으로 2013년 0.302로 낮아져,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정도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빈부격차 : 빈곤층 하위 10% 대비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

*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의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니계수 :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지표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에 따라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형함을 의미